

종전선언 대신 평화선언?...70년 한반도 휴전체제 매듭

‘하노이 선언’ 무슨 내용 담길까

외신들 “선언 계기 평화체제 논의”

“평화선언보다 나은 조치 없을 것”

싱가포르 선언 구체화 내용 담길 듯

북미 정상이 2차 핵담판에서 합의하게 될 ‘하노이 선언’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지난해 ‘싱가포르 선언’을 한층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화두로 떠오른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부분이다.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서 종전선언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26일 기사에서 ‘평화조약’(peace treaty)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난 70년간 계속돼 온 한반도 휴전을 매듭짓는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방안으로 평화선언, 종전선언, 평화조약, 평화협정 등 여러 형태가 거론돼 왔으나 이중 ‘평화선언’이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쟁 당사자인 한국, 중국도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하지만 평화선언은 그 전 단계로서 북미 양국이 상호 불가침 혹은 안전보장을 담보하는 선언 형태가 될 수 있다.

NYT는 “선언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넘어서는 평화 프로세스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남과 북은 국경지대에서 서로의 병력을 철수시키고 서로의 이행 상황을 감독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립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소장도 25일 미 군사안보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선언’보다 미국과 한반도의 안보를 더 잘 담보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강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카지아니스 소장은 “학자들은 평화선언과 같은 행동을 양보, 완전한 시간낭비 등으로 매도해왔지만 이제 생각을 달리해야 할 때”라면서 “평화선언은 작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우리의 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동안 당근과 채찍, 이른바 ‘전략적 인내’ 등을 시도해왔지만 아무것도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줄이지 못했다”며 “좀더 과감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도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진지하게 바라는 시점에서 북한을 설득할 유일한 방법은 평화선언이며, 이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 북한 내부 엘리트들에게 미국이 북한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증거로 내세워 비핵화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돼 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장인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앞이 관계자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할까

싱가포르 회담 중단 발표후 줄줄이 취소...美 국방부 촉각

미국 국방부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CNN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논의될지, 훈련 중단이 결정될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그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트가디언(UFG),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등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중단 또는 연기됐다. 이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외세와의 합동 군사훈련과 외부로부의 전쟁장비 반입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군 유해 추가 발굴 및 송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으로 보냈

지만 이후 추가적인 유해 발굴·송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미 국방부는 비무장 지대 북쪽 지역에 약 5300구의 미 전사자 유해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늦춰졌던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대규모 상륙작전 쌍룡훈련이 실시된 2일 오전 경기 평택 미8군사령부에 아파치(AH-64) 헬기가 계류되어 있다. 올 봄에는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등 2개의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으며 미 국방부는 이들 훈련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데이브 이스트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견고하다”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높은 군사력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초 CBS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은 없고 이를 논의할 적도 없다”면서도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현지에 미군을 주둔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 한반도체제 시작” “북핵 용인 우려”

기대·샘법 엇갈린 정치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세기의 빅이벤트이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담 결과에 따라 국내 정치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전망이다. 당장, 4·3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 하다. 이에 따라 2차 북미회담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의 기대와 샘법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신(新)한반도체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며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담회에서 “오늘은 한반도의 진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며 “이번 회담 결과에 한반도에 사는 8000만 한민족의 생존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종전선언까지 상호 합의한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무췌록 좋은 성과를 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분단과 냉전체제를 마감하는 회담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반도평화의 새 시대를 열 역사적 만남이 드디어 오늘 열린다”면서 “하노이선언은 한반도평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영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따라 한반도평화와 번영이 무르익고 있다”며 “하노이 회담은 새로운 평화체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

다봤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회담으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과 대북제재 해제, 경험 보장하는 빅딜을 성사시켜 동북아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건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영변, 동창리, 풍계리의 핵미사일 폐기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을 갖고 ‘스물달’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뒤, “이번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 평화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개성공단 비대위위원회는 27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19 남북 정상 간의 평양 선언 내용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경험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국민 경청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2차 북미회담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차 북미 회담 결과는 정국 운영에 있어 새로운 지도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럼 분위기를 반영하듯,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미북 회담이 보여주기식의 이벤트가 돼선 안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장해제와 북한에 대한 퍼주기 받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제의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